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4
----------	-----

발의연월일 : 2024. 6. 25.

발 의 자 : 엄태영 · 신성범 · 서천호
이종배 · 주진우 · 김상훈
조경태 · 권성동 · 임종득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함.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

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또는 가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배상책임)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조(배상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u>